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1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용장 수여식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부의장직 공석 상임위원장이 채울까 '셈법 복잡'	2
강원도민일보	04면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 사임에 위원회 안팎 '당혹'	3
江原日報	02면	지방정부 따라 흔들… 자치경찰제 한계 또다시 수면위	3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 용대보건진료소 개소 의료서비스 제고	4
강원도민일보	16면	"디지털 관광 플랫폼 구축 젊은 양양 변신"	5
ms투데이	온라인	강원 성인지예산 전국 평균 이하? “예산 편성 우선권 줘야 ...	6
江原日報	21면	“강원지역 특성 맞춤형 재난재해 예방·대응활동 앞장”	7
江原日報	03면	국힘 일편도심 총선거획단 오늘 영월서 지역순회 시동	8
江原日報	14면	동해시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8
江原日報	10면	[알립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전략 점검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강정호 도의...	10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박기영(원주) 도의회안전건설위원장·양숙희 도의원	10
江原日報	02면	道 신청사 내년 초 설계·보상 착수	11
강원도민일보	11면	2청사 운영 첫날 "편리하지만 시민홍보 필요"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올해부터 양양 송이·연어축제 한자리서 만난다	13
강원도민일보	09면	수열클러스터 A스타트업 센터 구축 제동	13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 북평선·묵호해안선 '트램' 개발 착수	14
江原日報	05면	“보상금 언제 받나” 고성산불 4년 이재민 분통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FC 경기는 관광 콘텐츠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우선해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투자선도지구 성공, 기업 끌어들이 유인책 달려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北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18

江原日報

2023 07 26 ()

21



도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이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박용식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용장 수여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박용식 신임 사무처장 등 인사발령 대상 직원 2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03

도의회 부의장직 공석 상임위원장이 채울까 '셈법 복잡'

선출 관련 '다선의원 추천' 언급

초선그룹 도전 여부도 주목

김기하 출마 피력·윤길로 고심

국힘 '민주당 뒤통스' 선 그어

공석이 된 강원도의회 부의장직을 둘러싸고 도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1부의장을 맡았던 이기찬 전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의장 선거가 오는 9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선의원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된다.

또, 다선 의원은 물론 기초의회의장 경력에 있는 초선 의원 그룹의 부의장 선거 도전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혁열 의장과 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박찬홍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정실에서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선출대상'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종합하면, 공석이 된 부의장직에 다선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언급됐다.

김기홍 부의장은 25일 "국회를 비롯해 다수 의회가 다선 의원에게 의장단 역할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순리를 따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장 가운데 한 명이 부의장직을 맡고,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직을 새로 선출하는 안이다. 현재 다선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선 김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박윤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다만, 심영곤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 7명 상임위원장 가운데는 부의장직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7명 위원장 모두 위원장직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상임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의장 출마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며 "다선의원으로 출마 기회를 한정하는 것은 '뽕수'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 기초의원 이력 가진 의원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다.

3선으로 동해시의장을 지낸 김기하(동해) 의원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

다. 김 의원은 "의원과 의장, 사무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의장의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재선으로 영월군의장을 지낸 윤길로(영월)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6명의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외'가 되는 모양새다. 류인출 민주당 원내

대표에 따르면, 최근 박찬홍 대표에게 3선의 박윤미 의원 등을 언급하며 부의장직 배분을 언급했지만, 긍정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 뒤통스 상임위원장직으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민주당 배분에 선을 그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04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 사임에 위원회 안팎 '당혹'

임기 8개월 남기고 시작서 제출
도·도의회 관계 등 사의 배경 관심
김 지사, 후임 물색 임명절차 진행



송승철(사진)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송승철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시작서를 제출했다. 아직 시작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2021년 4

월에 취임,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임기까지 8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송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금 당혹스러운 면은 있다"고 했다. 송승철 위원장 역시 본지에 "말 말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김진태 지사 체제 출범 이후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간의 불

편한 관계가 지속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송승철 위원장은 초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자치경찰 모델 확립에 애를 써 왔지만 김진태 지사 당선 이후 도와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도의회와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 예산안 86억7900만원 중 6억4900만원이 강원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자치경찰제 및 자치경찰위 사업 홍보예산 1억33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통분야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비 22억5626만원도 도의회에서 4억51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주요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의 질책은 최근에도 계속됐다. 최근 열린 도의회 심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향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숙희 의원은 "자치경찰위 예산이 지난해 상당수 삭감됐는데 의원을 만나 부족함을 이야기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지광천 의원 역시 "위원장이 예산 반영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미답지 못하다"고 했다.

송승철 위원장은 시작서 제출 전 김진태 지사와 만나 사의를 직접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립대 총장을 역임한 송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경찰위원은 "송 위원장과 김 지사가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을 이해시키는 단계는 끝났으니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김 지사는 후임 위원장을 물색,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3 07 26 ()

02

지방정부 따라 흔들... 자치경찰제 한계 또다시 수면위

현 도정 심포지엄 취소·예산 삭감 도의회와 소통도 난항
"송 위원장 사의 예견된 결과" 반응... 경찰 안팎 혼란 우려

송승철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역 사회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임명된 송 위원장에 대한 김진태 도정의 '불편한 시각'이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작은 지난해 10월 강원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국제심포지엄 취소였다. 송 위원장이 이끄는 자경위는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1년 가까이 공들여 준비했지만, 개최를 불과 보름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예산 전액을 도에 반납했다. 자경위원인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경위 독립성 위기'를 들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 지난해 12월에는 2023년 자경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특

히 유례 없이 업무 추진비가 전액(2,800만원) 삭감되면서 현 도정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의힘으로 바뀐 강원자치도의회와의 소통도 난맥상을 보였다. 지난 14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자경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한계는 다시 한번 드러났다. 경찰법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교체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위원회는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송 위원장 사의 표명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건이다.

자경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송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전 도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경우 '울스톱' 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강원자치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혼란이 빨리 수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13

용대보건진료소 개소식이 25일 북면 용대리 현지에서 지역 사회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 용대보건진료소 개소 의료서비스 제고

보건 교육·상담·치매관리 제공

인제군 북면 용대리 주민들의 새로운 건강 증진의 거점이 될 용대보건진료소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들어갔다.

용대보건진료소 개소식이 25일 북면 용대리 현지에서 최상기 군수, 이춘만 군의장과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각보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회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대보건진료소는 기존 진료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마을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국비 2억1800만원과

도비 54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연면적 296.044㎡에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됐다.

진료소 내부에는 진료실, 건강증진실, 건강관리실, 직원 숙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획득했다.

진료소는 총 1220여명의 용대 1·2·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더불어 보건 교육과 상담, 치매관리 등을 비롯한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상기 군수는 “용대보건진료소가 주민을 위한 쉼터이자 건강 지킴이로 애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16

“디지털 관광 플랫폼 구축 젊은 양양 변신”

군, 스마트관광도시 선포식
관광앱 ‘고고양양’ 5만건 다운
편의시설·관광지 정보 수록

‘서핑의 고장’ 양양군이 스마트관광
도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군은 25일 현남면 죽도해변에 조
성된 위케이션센터 ‘웨이브웍스 양
양’에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
장, 강옥희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와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군의장,
진중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스마트관광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노마드데이 양양’을 주제
로 개최된 이날 선포식에서 김진하
군수는 “양양군은 군 단위로는 최초
로 스마트 관광도시로 첫 출발하게



양양군은 25일 현남면 죽도해변에 조성된 위케이션센터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스
마트관광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됐다”며 “서핑을 특화콘텐츠로 오피
라인 관광불편에서 벗어나 디지털화
된 관광 플랫폼이 구축된 만큼 진정
한 삶과 휴식이 있는 젊은 도시로 거
듭나는 양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인구 2만8000명에 불과한 양양군에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스마트관광
시티로 거듭나게 됐다”며 축하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또 스마트관광
도시 핵심플랫폼인 관광 통합 앱 ‘고
고양양’ 회원가입 이벤트와 함께 위
케이션센터, 포토존, 고고양양 아이
덴티티가 담긴 디지털 타투 등의 부
대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양양 전역 900여개의 관광지
와 주차, 편의시설 등의 정보가 수록
된 ‘고고양양’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인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 5만건을 기
록하고 있다.

최훈

2023 07 26 ()

ms투데이

강원 성인지예산 전국 평균 이하? “예산 편성 우선권 줘야”

한승미 기자

도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도 성인지예산 4.0%, 전국 평균 5.33% 못미쳐
“성인지예산의 편성 우선권, 성과평가 필요해”



‘2023년 성평등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이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한승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의 편성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주최로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성평등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에 참석,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강원지역이 성평등 지표나 워라벨 지표 등에서 꼴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성인지예산은 예산안, 결산서 첨부서류 목록에서 고트머리에 있는데 이는 정책과 예산 중요성 차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관심이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다면 예산 편성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성주류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의회·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성인지예산 기관별 성평등목표,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효과를 고려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 구조와 순치를 변화시키는 제도다.

도는 올해 예산 중 130과제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0%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5.33%에 못미치는 수치다.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이 포럼 지정 토론에서 성인지예산 편성 우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승미 기자)

이날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임미선 도의원은 토론에서 “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같은 성별 분류가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끼워넣기식,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맞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성인지예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이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수립된 실천 방안들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원이 내달 개정판을 발간하는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에 포함,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우리 도가 성인지예산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해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작은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강원지역 특성 맞춤형 재난재해 예방·대응활동 앞장”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가 25일 강릉영동대 예지인관에서 강원지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초대 강원지사장을 맡았고, 고성군 주민복지실장을 역임한 고광선 사무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강원지사는 앞으로 산불, 수해 등 재난재해가 많은 강원지역의 환경·사회적 특성에 맞춰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는 산불 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2019년 550여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구호활동과 모금으로 336억여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올 4월 강릉산불 이후에는 피해세대 긴급지원, 가전제품 지원 등을 추진했고, 현재 2차 국민성금 지원을 협의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명선 강원특별

자치도 행정부지사, 송필호 희망브리지 강원지사 개소·초대 지사장 권혁순 본보 논설주간, 신문·방송사·사회단체 주도 설립 1조6천억원 성금 지원 눈길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가 25일 강릉영동대 예지인관에서 강원지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도 행정부지사,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 김일용 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회장, 김종욱 강릉부시장, 심오섭 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현인숙 강릉영동대 총장,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여러 차례 큰 산불 등을 겪은 강원도에서 희망브리지의 역할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며 “강원지역에서 보다 전문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지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희망브리지 강원지사 개소를 계기로 여러 재난이 많았던 강원도에서 실효성 있는 이재민 지원 및 예방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성금과 6,000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누적 지원했다. 강릉=최영재기자

江原日報

2023 07 26 ()

03

국힘 일편도심 총선거획단

오늘 영월서 지역순회 시동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一片道心) 총선거획단’이 26~27일 영월군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순회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일편도심 총선거획단은 26일 오후 5시 영월군 당협 사무실에서 박정하 도당위원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길수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7일까지 1박2일간 강원남부권 현안을 청취하고 총선 공약을 개발한다.

김길수 단장은 “강원남부권은 영월~제천 고속도로 개통과 삼척 연장이 주요 현안 과제이고 봄철 식수난 해소 등 민생과 결부된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라며 “폐광지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위기 탈출 등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3 07 26 ()

14



동해시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제27회 동해시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5일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서 최종수 대한노인회 시지회장,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7 26 ()

10

알립니다 춘천 바이오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

기업혁신파크 조성 전략 점검

2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서 개최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는 춘천시와 함께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민선 8기 춘천시는 의료 분야와 IT·데이터 분야를 아우르는 차세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밀의료복합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도시가 완성되면 160개 기업 유치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날 포럼은 올 하반기 정부 공모를 앞두고 관계 기관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점검하고 다양한 현장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강원자치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28일(금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 : 한림대 국제회의실

◇기조 발표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

◇주제 발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이호상 다쏘코리아 대표

◇종합 토론

△사회 : 안무업 한림대 교수

△토론 :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태원 강원대 교수, 최종수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수석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무철 강원자치도의원

■주 최 : 춘천시, 강원일보사

■주 관 : 강원일보사

江原日報

2023 07 25 ()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강정호 도의원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 특례반영을 위한 환경분야 워킹그룹 1차 회의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리는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09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16



강정호(속초)도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속초시청 디

지털상황실에서 열리는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에 참석한다.



박기영(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양숙희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 환경분야 워킹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7 26 ()

02

道 신청사 내년 초 설계·보상 착수

내달 정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건축비 4,900억 추정
보상비 700억대 추산... 8월 보상위 구성 연말까지 감정평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제2청사가 개청하며 본청의 춘천 고은리 이전·신축 추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원자치도는 정부의 승인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는 한편 올해 감정평가액을 확정, 내년 초부터 이전 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 도청 신청사 타당성 조사·검증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 중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이전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한다. 4,9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신청사 건축비는 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보상위원회를 구

성해 도청사이전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선다. 우선 연말까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별적인 보상 협상에 돌입한다. 도청사이전 부지 내 사유지 비율은 96%로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용과 지장물 보상비, 진입도로 개설 등에 7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역시 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도청사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행정복합타운에 입주할 공공기관, 민간·상업시설 등의 분양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행정복합타운 입주를 결정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승인 절차를 거

쳐야 하며 분양을 받아 입주할지, 도시계획시설로 건립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상과 함께 설계도 시작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연말에 마무리된다.

기본계획 용역에는 도청사의 콘셉트와 규모 등이 담겨 있다. 도는 본청, 의회, 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 지상 7층, 면적은 본청은 3만 8,920㎡, 특별자치도의회 청사는 9,852㎡ 규모로 구상 중이다. 주차면수는 현 청사의 842대보다 2배 이상 많은 1,750대(지하 1,350대, 지상 400대)까지 확충한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센터, 북카페를 광장과 함께 조성해 도민의 휴식·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내년 초 설계공모를 거쳐 1년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착공 목표는 2026년 3월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11

2청사 운영 첫날 “편리하지만 시민홍보 필요”

종합민원실 본격 업무 돌입
주민 빠른 행정서비스 기대
청사 위치 몰라 일부 혼란
“홍보 강화 등 안정화 최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에는 반신 반의한 표정을 한 지역주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25일 제2청사 글로벌관에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존 대학 건물에서 청사로 새롭게 꾸며진 건물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종합민원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지역주민들이 여권 발급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방문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정확한 2청사 위치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종합민원실에서 한 주민이 여권 발급을 하고 있다.

를 몰라 대학 내를 헤매거나 환동해 본부에 갔다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으며, 청사 위치 등을 묻는 문의 전화도 걸려왔다.

주민 강현민(32·주문진)씨는 “여권 발급 장소를 검색해보니 새롭게

개청한 2청사에서 가능하다고 해 전화로 위치를 문의해 찾아왔다”며 “새롭게 건물을 단장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앞으로 가까이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장석구(41)씨는

“2청사 개청 소식을 듣고 어떻게 조성됐는지 궁금해 인근을 지나다 일부러 들렀다”며 “주문진에 2청사가 개청해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대학 안쪽 건물에 위치해 있어 방문자들이 찾기 어려워 홍보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개청 직후라 많이들 찾아주실까 궁금했는데 오전부터 주민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 다들 너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청사 위치 홍보 등을 더 강화해 2청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제2청사에 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해 영동·남부권 주민들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04

올해부터 양양 송이·연어축제 한자리서 만난다

가을 대표축제 통합 시너지 기대

양양을 대표하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올해부터 통합 개최된다.

군은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올해 '송이&연어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와

다목적광장, 전통시장 일대에서 통합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1997년 개최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각각 문화관광축제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영동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가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체 분석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축제를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 축제의 시너지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결론짓고 두 축제의 통합을 결정했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양양문화재단은 연어축제의 경우 연어가 갖는 교육, 환경, 생태적 가치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두 축제의 통합을 통해 새

로운 맛과 공간, 스토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 변화로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대천변 주변에 최초로 공간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고 축제 시간대도 확장해 오후 10시까지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호열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축제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송이·연어축제가 소재만 다를 뿐 비슷한 시기에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등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올해부터 통합 개최되는 만큼 글로벌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최적의 지역 축제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훈 choi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09

수열클러스터 시스타트업 센터 구축 제동

시의회 심의 부결 지연 불가피
사업추진 주체 변경 등 자료 부족
시, 설명 보강 임시회 재상정

속보=춘천 동면 지내리에 조성되는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안에 AI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공유재산 취득과정에 제동(본지 7월 24일자 웹보도)이 걸리면서 수열클러스터 첫 사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하고 의료 AI 스타트

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안건을 부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면 지내리 822번지 일대에 정밀의료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의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사업이기도 하다.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실상 첫 입주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될 당시 강원도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지방비와 시·도비 분담비율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사업추진 주체를 춘천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출자료가 부족하고,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추진 주체가 넘어간 점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박제철 시의원은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중앙투자심사가 지 받은 것을 왜 춘천시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자료가 더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취득절차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설계 용역 등 추후 절차도 수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시의회에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추후 건물 관리 등을 고려해 사업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측의 의견이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시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다시 준비해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기업유치의 경우 K-water측의 유치 전략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강원도와 춘천시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와 시는 우수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특별설계 공모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법상 예외 부분이 있는 상황도 고려해 기업 유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12

동해 북평선·묵호해안선 '트램' 개발 착수

연내 용역 완료 내년 1월 계획 수립

북평선 등 동해시 2개 노선이 관광·교통수단 겸용의 도시철도 '트램'으로 개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해시는 삼화역~동해역을 잇는 기존 '북평선'과 묵호역~대진동 간 신설 '묵호해안선' 노선에 대한 '강원도 도시철도(트램)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3월 착수,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 총연장 6.4km인 북평선 철도 노선의 물동량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도시철도 전환에 따른 기술검토 등 장래 활용 방안 연구와 함께 경제성 검토도 이뤄진다. 묵호해안선은 묵호역~대진동 5km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묵호항선의 폐선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원주·강

릉·동해·속초시 등 5곳에 관광·교통수단 겸용 도시철도(트램) 건설을 목표로 올해말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후 2024년 1월쯤 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북평선과 묵호해안선 등 2개 노선이 도의 도시철도망 노선 검토안에 반영돼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전기로 주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로 프랑스 파리나 홍콩 등 전 세계 50여 개국 2300여 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3 07 26 ()

05

“보상금 언제 받나” 고성산불 4년 이재민 분통

정부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속보=2019년 고성산불로 폐허가 됐던 속초 장전마을의 A(66)씨. 경운기, 고추 건조기 등이 있는 창고가 전소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액 1,700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아직도 이 금액을 모두 받지 못했다.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을 두고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4대째 내려오며 쓴 농작업 장비를 잃은 상실감, 예전 같지

않은 마을 분위기 등으로 상처가 큰데 보상마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 혼란은 언제 끝나는가”라고 탄식했다.

정부가 한전과 벌인 구상권 소송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사실(본보 25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진 26일 고성·속초지역의 이재민들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날벼락을 맞았다” 혹은 “설마 했는데 정부가 결국 항소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주택, 창고 등이 전소돼 6억원 상

1,480건 200억여원 보상금

소송 여파로 아직 지급 안돼
비대위 정부 비판 여론 확산

소송 대법까지 장기화 가능성
한전 보상금 추가지급 검토중

당의 자산을 잃은 B(76·속초 장사동)씨가 한전으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액은 2억8,000만원이다. 이마저도 모두 받지 못했다. 국민 성금과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고, 매월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B씨는 “고령에 농사를 지어 봐야 월 소득이 뻥하고, 대출로 지은 집에 사는 것도 억울한

데 4년 넘도록 보상 문제가 해결 안돼 통탄스럽다. 농사꾼이 법은 모르지만 이게 정부가 할 일 아니냐”며 “산불 당시 대통령까지 다녀가며 ‘나라에서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이재민에게 혼란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민들은 정부 방침에 실망감을 보였다.

정부(행정안전부 등)는 2019년 고성산불 소송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최초의 구상권 소송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한전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전

에 청구한 400억여원 중 60억여원만 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고성산불비상대책위와 한전은 다음 주 초에 협의를 한다.

한전은 “항소가 제기돼 당혹스럽다. 이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구상권 소송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약 200억원이다. 한전이 피해 조사를 벌인 2,050건 중 1,480건이 구상권 소송의 여파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 19

강원FC 경기는 관광 콘텐츠

-상대팀 관중가세 1만 돌파, 강등권 탈출 과제

강원FC에 대한 팬들의 성원이 뜨겁습니다. 비록 꼴찌의 성적으로 강등권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기장엔 관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인기에 힘입어 강릉 홈경기장은 최다 유료 입장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때 상대 팀 팬 2500여명이 원정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원FC 경기의 관광 콘텐츠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여행 상품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팀의 분발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22일 강릉에서 열린 홈경기에는 역대 유료 관중 최다인 1만1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수원 삼성과 열전을 벌인 이날, 관중들은 경기 2시간 전부터 입장하는 등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전 후반 치열하게 펼쳐진 플레이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는 7006명이 찾았으며, 1주일 뒤인 15일 FC서울과의 경기에는 7203명이 찾아 두 경기 연속 7000명대의 유료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강릉 홈경기에서만 2만 5000여명이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22일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대팀 응원단의 규모와 열기입니다. 2500여명의 수원삼성 팬들은 90분 내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양팀의 응원전이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정 응원에 힘입어 수원 삼성은 강원FC를 상대로 1점 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달 12일엔 울산 현대와의 강릉 홈경기가 예정돼 관중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경기는 관광 콘텐츠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플레이어의 활약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미 영국·스페인 등 유럽 프로리그는 세계인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유명 여행사도 프리미어리그 관람 상품을 출시해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춘천·원주·강릉에서 열리는 강원FC 홈경기도 상품화할 여지가 많습니다.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1박2일 여행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FC가 부진을 면치 못해 2부 리그로 떨어진다면, 관광 코스화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팀이 강등해 도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열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2부 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6 ()

/ 19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우선해야

-8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24명 체제 완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8월부터 정책지원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6명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정책지원관 제도에 따라 4월 6명의 지원관을 선출한 이래 1년 6개월 만에 24명의 지원관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강원도의회 의원 정수가 49명이기 때문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24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정책입안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책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의회 권한과 연관된 포괄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과 비슷하지만, 의원 개인에게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고유 직무인 조례 등 법령의 재개정과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전문역량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질의와 연설,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부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요청이 균형과 견제라는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된 도의회의 한계도 작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체제의 완성은 도의회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먼저 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을 환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행사의 경우 정책지원관의 지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등 구체적 지원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칫 정책지원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의원 개인의 수행비서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26 ()

/ 19

투자선도지구 성공, 기업 끌어들이 유인책 달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서 최근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등 3곳이 선정됐다. 정선군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돼 2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 지역문화특성 산업, 테마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의미 있는 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200억원이 투입된다. 양구 스포츠행정 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원이 투자된다.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 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며 1,4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의 핵심은 그 지역에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 부여에 있다. 즉,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며, 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가지의 인허가 의제 협의 등 특례가 부여된다.

투자선도지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민간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투자선도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등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비 지원과 동시 조세 감면 등 특례 부여
민간 투자 결정 전에 경제성 분석 제대로 해야

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관광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강원자치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산과 계곡, 바다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곳이 강원자치도다. 봄이면 상춘객이, 여름이면 피서객이, 가을이면 단풍을 즐기려는 단풍객이, 겨울이면 눈 덮인 산과 겨울스포츠를 체험하려는 많은 수

의 사람이 강원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부터 산과 계곡, 바다 등 도내 모든 곳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

람이 찾아오는 곳은 그만큼 살기 좋고 음식이든 숙박이든 빼어난 경치든 강원자치도가 좋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 투자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엔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할 때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 보장이 전제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확정하기 전에 경제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자치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7 26 ()

/ 19

北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4일 밤 11시55분께부터 25일 0시께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이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 군사행동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도발로 보인다. 아나폴리스함의 입항은 지난 18~21일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이후 시를 만으로 미국 원자력 잠수함들의 한국 기항은 전략자산의 지속 전개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의 확장 억제력 과시에 미사일 도발로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며 크게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으로 전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력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고, (이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가능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의 안보·경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확장 억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가동시키고 공동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제재하고 응징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